

전국 자치단체, 5.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

- 행정안전부,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개
- 자치단체별 미등록 공유재산 재산권 확보,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 재정확충

-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「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」을 수립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.
 - 해당 대책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.
-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, 발굴된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을 독려하고, 토지·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'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'도 실시 중이다.
 - 2023년 실태조사 결과, 부산광역시 2,064억, 충청북도는 3,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,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(광역시·기초)는 약 5.4조원 규모, 여의도 면적 8.3배의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하였다.
 - 각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사업부지로 활용하거나 지역소상공인 등에 대부하여 수입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 -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적발된 총 11,918건에 대해서는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'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'를 공개하고, 약 5.4조원 규모, 여의도 면적의 8.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.

-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·건물 등 재산으로,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「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」을 수립하고,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.
-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,
 - 부산광역시 2,064억, 충청북도 3,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,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였다.
 -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,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,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,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,212필지는 등기촉탁 하였다.
 -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,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.
-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,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.
 - 특히,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,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3,224건에서 2023년 16,030건으로 21.2% 증가하였다
 -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1,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, 2,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
 -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,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하였다.
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 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도록 했다.
 -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 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,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.
 -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.
-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 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”며, “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”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서상우 (044-205-3771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장유진 (044-205-3790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